



# 경제 이슈 분석



경제이슈분석 | 2015-3호 | 2015년 8월 4일 |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민주정책연구원 국민경제연구센터

# 한국 주력 제조업 현황과 과제

백운광 연구위원(국민경제연구센터/경제학 박사)

#### < 요약 >

- 국내 주요 대기업의 상반기 실적을 볼 때 우리 주력 제조업인 전자·자동차·철강·조선 산업의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전망은 모두 부정적임
  - · 상기 분야 주요 기업의 상반기 매출은 모두 전년 동기에 비해 하락하였으며, 영업이익도 대체로 감소하거나, 적자를 기록함
  - 단기적으로 세계경제 침체와 엔화-유로화의 약세, 구조적으로는 중국의 성장전략 변화와 국내 기업의 해외생산 확대가 주요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음.
- ◎ 제조업 생산의 부진에 대해 정부의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함
  - 단기적으로 일부 철강제품의 미국 내 반덤핑 제소, 조선업계의 구조조정에 있어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됨.
  - ·장기적으로는 국내 제조업 혁신을 통한 제조업 재도약 방안이 필요
- ◎ 특히 각국의 제조업 부흥정책에 대응하여 글로벌 가치사슬 점검 및 국내 공급사슬 고 도화를 위한 '제조업 혁신 3.0'의 개선 및 적극적인 추진 필요
  - •미국의 (제조혁신 가속화를 위한) '신행정 행동계획', 독일 '인더스트리 4.0', 일본 '일본 재흥전략 개정판 2015', 중국 '중국제조 2025' 등 세계 각국은 적극적 노력에 나서고 있음.
- ◎ 정부, 특히 관련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책임성과 자율성이 요망됨.
  - •각 부처가 대통령의 지시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스스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
  - 구조적 변화가 진행 중인 세계 제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정부의 신속한 점검과 근본적인 방안 구축만이 국내 제조업의 해당 기업들에게 미래에 대한 전망을 가능하게 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한국 주력 제조업 현황 및 전망>

- □ 국내 주력산업의 주요 기업 상반기 실적
- 최근 발표된 국내 주요 대기업의 2/4분기 실적을 볼 때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전자, 자동차, 철강, 조선 산업의 상반기 성과는 부정적임.

# 표1> 우리나라 주력산업 주요 기업 2015년 상반기 실적

(단위: 조원, %)

				,	. , ,	
산 업	기 업	상반기 매출		상반기 영업이익		
전자	삼성전자	96.66	-9.78	12.88	-17.85	
	LG전자	27.92	-3.9	0.55	-49.5	
자동차	현대자동차	43.76	-1.4	3.34	-17.1	
시하시	기아자동차	23.62	-1.5	1.16	-22.8	
철강	포스코	30.29	-5.8	1.42	-9.7	
20	현대제철	7.16	-11.7	0.76	29.2	
조선	현대중공업	24.17	-8.2	-1.36	71.9	
그건	삼성중공업	4.05	-38.1	-1.52	-1,418.8	

자료 : 각 기업 연결재무제표기준 영업(잠정)실적 공시 자료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 2015년 주력산업별 주요 대기업 상반기 매출 성과, 전년 동기 대비 대부분 하락하였음.
  - 표1>의 8대 기업 중에서 상반기 매출이 가장 큰 기업은 삼성전자(96.99조원)이며, 현대 자동차(43.76조원)가 그 뒤를 잇고, 가장 작은 기업은 삼성중공업(4.05조원)임
  - 삼성중공업이 가장 큰 하락률(-38.1%)을 기록하였으며, 삼성전자(-9.78%)와 현대제철 (-11.7%), 현대중공업이 10% 내외의 큰 하락률을 보임.
- 상반기 영업이익 역시 전년 동기 대비 대부분 하락하였으며, 상승한 기업도 흑자 규모가 작거나 적자를 기록함
  - 삼성중공업은 전년 동기 대비 140배가 넘는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삼성전자 역시 전년 동기에 비해 2조원 이상 영업이익이 줄어들었음.
  - 흑자를 유지하면서 전년 동기에 비해 이익이 늘어난 기업은 현대제철이 유일하나 그 규모는 2천억원에 불과함.
- 각 산업의 부진은 공히 수요 둔화와 주력 분야의 낮은 성과에 기인함.
  - 전자산업의 매출 감소와 수익 악화는 주로 정보통신기기의 낮은 성과 때문에, 자동차산 업은 국내 내수와 북미 수출 증가에도 유럽 및 신흥국의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 감소를 주원인으로 평가하고 있음
  - 철강산업의 부진은 세계 교역 및 중국 수요 둔화 등을, 조선산업은 특히 해양플랜트 수 주의 부실화를 상반기 실적 악화의 주요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음
- □ 한국 주력산업의 대내·외 환경과 하반기 전망
- 주요 대기업의 실적은 한국 주력산업의 현황에 그대로 반영되어, 상반기 수출 및 내수 실적뿐만 아니라 하반기 전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무역협회에 따르면, 상반기 수출은 전년동기비 5.1% 감소한 2,687억 달러, 수입은 15.6% 감소한 2,224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463억 달러 흑자를 기록함
  - 품목별로 보면 선박(12.2%), 반도체(6.0%)는 호조세이나 여타 품목은 부진한데, 선박의 경우 수출은 증가했지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영업이익은 적자를 기록함

#### 2015년 상반기 수출입 동향

(억 달러, 전년동기비, %)

	2012	2014	2015						
	2013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6월
수 출 (증가율)	5,596 (2.1)	5,727 (2.3)	451 (-1.0)	415 (-3.3)	469 (-4,5)	462 (-8.0)	423 (-11.0)	467 (-2,4)	2,687 (-5.1)
수 입 (증가율)	5,156 (-0.8)	5,255 (1.9)	395 (-11.8)	339 (-19.4)	385 (-15.5)	377 (-17.7)	361 (-15.4)	367 (-13,6)	2,224 (-15.6)
수 지	440	472	56	76	84	85	63	100	463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net)

출처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상반기 수출입 평가 및 하반기 전망」, 『Trade Brief』 No.41. 2015.7.27.

- 산업연구원은 상반기 제조업 생산은 수출 및 내수 모두 감소 추세에 있으나, 하반기 생산은 소재산업군(철강, 석유화학 등)의 수출 악화 등이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는 멈출 것으로 전망함
  - 하반기 자동차, 조선, 반도체의 수출 전망은 밝지만, 철강, 석유화학, 정보통신 및 디스 플레이 등 전자산업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거나 어두운 편임
  - 더구나 한국을 포함한 대미 철강수출국에 대한 미 철강업체의 반덤핑 제소로 인해 향후 철강의 대미수출은 제한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2015년 하반기 우리나라 주력업종 기상도

		수출	생산	내수	수입
기계 산업군	자동차	ದು	⇔		₽
	조선	₽	≎	0	0
	일반기계	0	0	66	<b>↑</b>
소재 산업군	철강	<b></b>	60	60-	<b></b>
	석유화학	<b>介</b>	0	0	<b>†</b>
	정유	<b>†</b> †	86	₽	<b>介</b> 介
	섬유	84	<b>†</b>	<b>†</b>	₽
Ⅲ 제조업군	가전	86-	0	$\sim$	66
	정보통신기기	0	0>	$\Box$	₽
	디스플레이	<b>T</b>	86	<b>†</b>	
	반도체	<b>\$</b>	₽	0	0
음식료		ದಿ	$\sim$	Φ.	1

주 : 1) 전망 :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5~-10%, ► -5~0%, ○ 0~5%, ☆ 5~10%, ☆☆ 10% 이상.

- 2) 생산과 내수의 경우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 정유는 석유제품, 섬유는 섬유사의 물량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금액 기준.
- 3) 수출과 수입은 모든 업종에서 달러화 가격 기준.

출처: 산업연구원, 「2015년 하반기 주요 산업 전망』, 『e-KIET 산업경제정보』 제617호 2015-14, 2015.6.24

- 전문기관들은 상반기 국내 제조업 생산의 침체 요인으로 단기 요인과 구조 요인을 지적
  - 단기·경기적 요인으로 세계시장 수요 둔화1). 엔화·유로화 약세 등을 거론
  - 구조적 요인으로 중국 성장전략 변화(가공무역 억제, 산업 자급률 제고)에 대한 대응 미흡, 기술경쟁력 확보 정체, 국내 제조업의 해외생산 확대 추세 등을 언급하고 있음<sup>2)</sup>

# <제조업을 위한 과제>

- □ 현재 한국 제조업의 어려움은 기업에게만 맡겨서는 해소가 어려우며, 국가 차원의 면밀한 연구와 대응이 필요한데, 현재 정부의 역할이 보이지 않음.
- 단기적 요인으로 제시된 세계경제 침체, 엔화·유로화 약세는 개별 기업이나 국가 수준에서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지만 단기적 요인은 처음 맞는 상황도 아니고 개별 기업 차원에서 노력을 통해 극복해야 할 문제이나, 철강과 조선은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 돌파구 모색이 어려운 상황임.
  - 철강의 경우 미국 철강업체의 반덤핑 제소로 인하여 미국 수출 감소가 우려됨.
  - 조선은 해양플랜트 수주 부실화, 대우해양조선의 분식회계 및 산업은행의 부실관리감독 의혹이라는 내부적 요인을 기업 스스로 극복하기 어려움.
  - 일부 철강제품의 미국 반덤핑제소 해결과 추후 발생가능성 차단, 조선업계의 잠재 부실화 대응, 구조조정에 의해 발생가능한 문제 등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함
- 구조적 요인은 개별적 기업 차원을 벗어나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 정부가 체계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신호가 없음.
- □ 특히 각국이 제조업 부흥을 위해 제조업 혁신에 나서고 있어 한국 역시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을 수립하고 대응해야 함.
- 미국은 2014년 10월 제조혁신 가속화를 위한 '신행정 행동계획'을 수립했고, 독일은 2015년 4월 '인더스트리 4.0' 전략을 정부 주도로 변경했으며, 일본은 2015년 6월 기존 '일본재흥전략'을 미래 투자 및 생산성 혁명에 맞춘 '개정판 2015'로 개정함
  - 특히 중국은 주요 제조업 선진국의 혁신정책과 관련하여 올해 5월 '2025년 세계 제조업 2강 대열 진입'을 목표로 '중국제조 2025'를 수립한 것으로 알려짐
- 이들의 의도는 부품 및 소재뿐만 아니라, 설비 및 장치 역시 자국 생산을 확대시켜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자국 부가가치 생산 비중을 높이려는 것임.
  - 예컨대, iPod가 미국에서 299달러에 팔릴 때, 이를 조립하여 수출한 대만의 부가가치수출은 5달러인 반면, iPod를 직접 수출하지 않은 일본은 한 대 팔릴 때마다 27달러 정도를 벌어들인다고 함3)
  - 총부가가치 수출을 총수출로 나눈 비율인 VAX ratio가 2011년 0.59로 미국(0.79), 일 본(0.81), 독일(0.69)뿐만 아니라 중국(0.75)보다 낮은 현실에서<sup>4)</sup> 국내 전문가들은 글로

<sup>1)</sup> 세계경제 성장률(%, IMF): ('07) 5.7 → ('13) 3.4 → ('14) 3.4

<sup>2)</sup> 한국의 對중국 중간재 수출증가율(%)은 급격히 감소하여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으며(2004년 47.7% → 2014년 -0.5%), 기술 수준역시 최근 5년간 미국을 100으로 볼 때 84 내외에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제조업의 해외생산 비중은 2013년 6.2%에서 2013년 18.3%로 10년간 약 3배로 늘어났다.

<sup>3)</sup> Linden, Greg, Kenneth L. Kraemer, and Jason Dedrick, "Who Captures Value in a Global Innovation Network?: The Case of Apple's iPod," Communications of ACM, Vol. 52, No. 3, 2009, pp.140~144. 참고로 한국은 1달러.

벌 가치사슬의 변화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와 대응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5)

- 이러한 논의들은 고부가가치 제품 추진과 함께 공급사슬을 통한 가치 총량 확대 추진이 필요함을 시사함.
  - 수입의존형 고부가가치 제품만큼 중부가가치 제품도 국내 공급사슬 고도화를 통해 국내 총생산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산업 및 무역정책은 양 방향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 국내 공급사슬의 고도화는 곧 국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의 발판이 되며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게 할 것임
- 궁극적으로 국내·외에서 생산되는 세계 최고의 첨단 소비재의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우리 기업이 최고 수준의 첨단 장비·소재·부품·디자인 등을 담당한다면, 한국 경제의 지위와 역할은 크게 높아지고 확대될 것임.
  - 최근 미국과 독일, 일본, 중국 등의 제조업 혁신 정책과 여러 연구기관의 권고안을 보면 이러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정책에 반영되고 있음

###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

- □ 각국의 노력과 비교할 때, 한국 정부는 문제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추진 의지도 부족
- 현 정부의 제조업 관련 산업정책은 '제조업 혁신 3.0'에 집약되어 있는데, 각 국 제조업 정책과 공급사슬 혁신에 대한 명확한 인식뿐 아니라 적극적인 추진의지도 부족해 보임.
  - 2014년 6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제조업 혁신 3.0'은 종합적으로 볼 때 국내 공급 사슬 제고에 기여하겠지만, 이에 대한 명시적인 추진전략은 제시하지 않음
  - 대부분의 과제가 최근 들어서야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를 발표하거나 여전히 미발표된 상황임.
  -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의 제조업 혁신 정책을 고려하여 '제조업 혁신 3.0'의 개선이 절실히 요구됨.
-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해외진출 촉진으로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라는 정책 기조 하에 FTA와 정상외교,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제시하고 있는데, 단기적 요인에 대한 대응은 부족하고, '제조업 혁신 3.0'과 관련된 내용은 일부에 그침
  - 정부의 이런 대응은 세계경제 침체와 엔화-유로화 약세라는 단기적 환경에 대한 대응으로는 부족하며, 정상외교는 해외진출 촉진에 있어서 하나의 계기일수는 있지만 이를 전체과정의 대응책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음
  - '제조업 혁신 3.0' 추진과 관련해서는 2020년까지 중기(中企) 스마트공장 1만개 보급, 100대 글로벌 생활명품 육성 이상 두 가지만 언급하고 있어 공급사슬 혁신을 위한 전면적인 노력은 기대하기 어려움

<sup>4)</sup> 정성훈(2014, 『글로벌 가치사슬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산업 및 무역 정책』, 한국개발연구원) VAX ratio는 수출에서 자국이 생산한 부가가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원자재, 생산 설비 및 장치, 소재 및 부품, 에너지 등을 수입에 의존할수록 작아지고, 그 반대의 경우 커진다. 이론적으로 VAX ratio의 최소값은 0보다 크며, 최대값은 1이 된다.

<sup>5)</sup> 포스코경영연구원 (2015.07.08, 한국 제조업 'Buy National' 검토가 필요한 시점), 현대경제연구원 (2015.07.10. 가공·중계무역의 규모 추정 및 시사점) 같은 민간연구기관뿐 아니라 한국개발연구원(2015.07.16. 우리나라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와 정책적 시사점)도유사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 정부와 청와대의 정책 대응 방향과 방식의 전환이 절실함.
- 공급사슬의 고도화와 관련하여 민간에서는 선진국들의 리쇼어링(reshoring, 해외생산에 서 자국으로 제조거점 회귀)을 평가하며 자국의 근면하고 숙련된 현장인력, 탄탄한 부품·소재산업과 제조생태계, 이상 세 가지 필요조건을 제시6)하고 있는데, 이는 제조업 부흥과 밀접한 관련을 지님
  - 현재 추진하려는 노동시장개혁이 우리나라 노동자의 근면을 저해하거나, 숙련형성을 방해하고 이미 형성된 숙련을 파괴하면, 이는 한국 경제에 더 큰 문제를 초래할 것임
  - '제조업 혁신 3.0'과 함께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계획에 부품·소재산업 지원, 탄탄한 제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방안이 유관 부처의 역할과 함께 포함되어야 함
- 지난 해 세월호 사건, 올해 메르스 사태 등을 통해 볼 때 정부 관련 부처의 기동력과 적시 대응력이 미흡한데, 여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업무방식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보임.
  - 정부 정책 과정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결정하여 구체적인 사항까지 지시해야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의 모든 분야에 걸쳐 가장 전문가인 것처럼 비쳐지는 것이 사실.
  - 관련 부처장관들조차 제도적 권한에 따른 자기 부처의 정책적 판단이 아니라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하거나, 대통령의 지시는 언제나 적시에 이루 어지는데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정책의 적시 시행이 어려웠다는 식의 발언을 하기도 함
  - 담당 부처의 정책 세부 내용까지 대통령의 언급이나 지시가 있기 전까지 실시되지 않는 다면, 정부의 기능은 마비될 수밖에 없음.
- 부처의 책임 정책 추진, 자율성의 필요성이 그 어느 시기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에 대통령의 만기친람식 정부 운영과 이에 기대는 정책 추진은 무능할 수밖에 없음.
  - 한국 제조업에서 정부의 역할이 실종된 것인지, 불가항력적인지, 무능한 것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음.
  - 한국 제조업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책임과 자율의 기조 아래에서 각 부처의 적극적 역할을 되살려야 할 것임.

<sup>6)</sup> LG경제연구원, Weekly 포커스, 2015.1.14.